

# 與 “李 위해 탄핵안 남발” vs 野 “尹, 김건희 여사 사고돌아”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與 “내달 이재명 법원 재판 예상  
판사 공갈협박·판결불복 사전 포석  
계엄령 의혹도 지지 받기 위한 행위”  
野 “김 여사, 韓 권력 1위 소리 들려  
300만원 가방 받았으면 기소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시

제 418회 정기국회 본회의의 시작과 함께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 초반부터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며 공세에 열을 올렸다.

국회는 9일 오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연 가운데, 야당의 첫 주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등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민주공화국에 권력 서열 1위라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권력 1위가 김건희 여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알

고 있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위기도 감사원도 작아지나”라며 “대통령이 여사만 사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잘 모시고 일했던 전직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식사비 10만4000원 상당을 경기도 법원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10만4000원 카드 썼다고 기소하면,

300만원 가방을 받으면 기소해야 하지 않나”라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꼬집어 냈다.

또, 윤 대통령이 불참한 제22대 국회 개원식 날에 청와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방한한 미국 상원 의원 부부가 만찬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개원식날 대통령이 미국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파티를 하나”라며 “정신나간 대통령실은 하필 이런 사진을 공개해서 입장을 지르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제까지, 비서실장, 공보수석,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의 최고였던 박 의원님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

했다. 대정부질문의 여당 첫 주자는 친윤계(친윤석열계)로 알려진 5선 중진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0월 11일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원 재판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향한 공갈 협박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기하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도 ‘개딸(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팬덤 정치가 의회 정치를 집어삼켜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만나신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국격, 민주주의,

경제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계엄을 활용하겠나”라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명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 있으면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여러 의원은 정권 교체 직전부터 탄핵을 운운하고 주말 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거나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도 열었다”며 “민주당에 요청드린다. 정말 그런 의사가 있으면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했다. 또 “국무위원과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안을 만들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문다혜씨의 전 남편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했다. 문다혜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몰염치한 썩거루”라며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다면,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겠나.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썩거루 게이트’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野 “검찰, 文에 증거없이 뇌물죄 덮어씌워… 불공정 수사 강력 대응”

## 전정권탄압대책위 출범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무혐의’ 처분  
검찰, 편향·차별적인 잣대 들이대”  
문다혜 씨 수사는 별건… 文 괴롭히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전정권탄압대책위)’를 출범시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대응에 나섰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출범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사인 김영배 의원 포함 13명의 의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

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 사위 타이이스 타겟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과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김영진 의원은 “검찰은 청탁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전정권탄압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불공정 수사 관행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독립 생계가 명확한 전 사위가 7년 전에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은 문제가 없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제2노동당시계”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당시 검찰이 노동당 시계에 관한)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 주기, 모욕주기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먼

지떨이 식으로 압박했는데 결국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수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13일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출범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검찰의) 민주당 전체와 문재인 전 정부 대한 공격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함께 일점 조율을 하고 특검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 같은 것에 발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정권탄압대책위는 검찰이 문다혜 씨의 수사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

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은 2018년이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문다혜 씨에게) 5000만원 뭇돈 또는 출판사가 2억5000만원 전달했다는 의혹과 제주도 주택 별장 표기 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을 본건으로 수사 중인데 진척이 없자 별건으로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윤 의원은 “제가 볼 땐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흘려서 문 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점을 언론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한 검찰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 與野, 정치·윤리개혁특위 구성 ‘공감’

유원식 국회의장·與野 원내대표 회동  
인구위기, 연금, 지방소멸 등 더 협의

여야 원내대표가 9일 만나 정치 개혁, 연금 개혁, 기후 위기, 인구위기, 윤리, 인공지능(AI), 지방소멸 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특위 설치에 대해 공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장님과 함께 국회 구성 특위 관련 관심 분야와 국회에서 설치해야 할 특위에 관해 말씀을 나눴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구위기대응특별위원회(인구특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지방소

멸특위)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라며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화를 활발히 하고 정부·여당이 이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장과 여야가 함께 인식했다”며 “함께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 尹,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임명

11년 만에 경찰 출신 경호처장 탄생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경찰출신의 박종준 전 경호처 차장(사진)을 임명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종준 신임 처장은 경찰대학 2기로 재학 중에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으로 임직했다.

경찰대를 수석졸업한 뒤 경찰청 마약

수사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마포경찰서장, 경찰수사연구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3~2015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역임했다.

박 신임 처장의 임명으로 이명박 정부 어청수 전 경호처장 이후 11년 만에 경찰 출신 경호처장이 탄생했다.

한편 군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서예진 기자 syj@